

##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융위원회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금융위원회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담당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4.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 단독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다만,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단순민원 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 등을 목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
  - 나. 소관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 다.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 라. 상정안건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5.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③ 정부위원은 기획조정관, 금융정책국장, 금융소비자국장, 행정인사과장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총 8명을 추천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감사분야 전문가는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민간위원의 해촉)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금융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4. 위원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때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결과의 보고 등 제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전컨설팅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정부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제3항 또는 제12조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0조(회의의 운영) ① 간사는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조사·자료수집·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해당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또는 관련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